

KMI

북한해양수산물리뷰

2020년 4호
DEC 30 2020

발간년월 2020년 12월 31일(2020년 4호)

발행인 장영태 총괄 윤인주 감수이성우 담당 진희권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82-51-797-4766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기획칼럼] 1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해양수산 전망
남성욱(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동향 분석] 5

대북제재와 코로나 속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북한동향] 9

2020년 북한 해양수산, 어선어업 감소하고 해운 증가
진희권(인제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내용 및 전송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연구실
윤인주 부연구위원 Tel_051-797-4724, E-mail_nkreview@kmi.re.kr
※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상기 전화 번호 및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기획칼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해양수산 전망

- 미중 갈등 심화로 동북아 바다에 높은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정보기관(DNI) 으로부터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PDB)’을 받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선거인단 선거 결과에서 패배하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본인 소유의 뉴욕 트럼프 타워나 플로리다 마라 라고 리조트로 돌아가 골프와 사업에 집중하던지 4년 후 차기를 도모하던지 백악관의 주인은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될 것이다. 청와대와 바이든 당선자 간 소통도 시작되었다. 지난 1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인은 전화 통화를 하였다. 통화의 키워드는 린치핀(linchpin)이었다. 핵심축이라고 번역되는 린치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회자되다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사라졌던 용어다. 바이든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린치핀은 바퀴가 축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인도·태평양지역 안전과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로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너스톤이라는 용어 역시 린치핀과 유사하게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용되다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사라졌다가 복귀한 셈이다. 요컨대, 바이든 당선자는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린치핀과 코너스톤으로 각각 지칭하며 동북아에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선언하였다.

코로나로 셀프 밀봉에 들어간 북한

한편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셀프 봉쇄는 밀봉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월 29일 국경과 분계연선 지역들에서 봉쇄장벽을 든든히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장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비상식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경제난 속에서도 “중국이 지원한 식량을 방치하고 바닷물이 오염되는 것을 우려하여 어로와 소금생산까지 중단했다”고 한다. 북한의 철통 장벽 구축은 코로나 봉쇄를 겨냥한 것으로 백신 지원을 통해 남북보건 의료 협력의 물꼬를 트려 했던 정부의 구상은 물 건너갔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봉쇄는 위기 수준으로 비화하고 있다. 주민 불만 해소의 희생양으로 환전상을 처형하고 외화 사용 금지는 환율 급락으로 이어지는 등 평양 내부 정세는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온정주의적 접근과는 달리 북한의 행태를 비이성적이라고까지 규정하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도전이 북한을 더 ‘북한스럽게’ 만들었다(made North Korea more North Korea)”며 좀 “이상한 상황”

이라고 중동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언급했다. 마침내 김여정 제1부부장은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6개월 동안의 침묵을 깨고 ‘강장관의 망언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서울로 보냈다. 김여정의 표현대로 남북관계에는 동지선달 냉기가 흐르고 있다.

왕이 부장의 방한: 세계에는 미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권 교체라는 민감한 시기에 방한한 왕이 부장은 한국에 양국 간 ‘공동인식’과 공통비전인 ‘청사진’을 제안하면서, 미국에 너무 쏠리지 말고 중국과 ‘국제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자는 뜻을 전하였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도 두 나라 간 ‘수망상조(守望相助)의 정신’을 강조하며 한국과 함께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망상조는 공통의 적이나 어려움에 대비해 서로 망을 봐주고 돕는 관계로 실질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뜻한다. 조찬을 함께한 문정인 특보는 “미·중 사이가 나빠지면 한국이 처신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왕이 부장은 “냉전전에 반대한다. 이는 역사적 발전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중국의 견해를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크게 웃으며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가”라고 답변했다. 오히려 “세계에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 중국도 모두 독립자주 국가”라며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10가지 항목을 발표하면서도 한국 발표에는 없는 “중·한 외교·안전 2+2대화 (외교안보당국 연석회의) 시동”을 언급해 한·중 관계의 ‘전략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용과 입장은 한국 외교부의 발표와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

앞선 일본 방문에서 왕이 부장의 행보는 한국과 달리 한계가 있었다. 왕 부장의 도쿄 방문은 냉랭한 분위기에서 끝났다. 왕 부장은 일본에선 협력이 필요한 가까운 이웃이라는 ‘일의대수’(一衣帶水)란 말을 꺼내들었다. 왕이 부장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회담에서 중·일 관계를 ‘장기적 협력 동반자’라고 하며 “적절한 전략적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냉랭한 분위기의 원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날 선 공방이었다. 일본에서는 상대가 만만치 않은 만큼 왕이 부장의 행보는 의전과 화법 모두 한계가 있었다. 결국 왕이의 순방은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시각차’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한미동맹에 대해 강한 견제구를 던지고 떠났다. 중국의 부상과 팽창정책은 한반도 정세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륙 국가 중국이 반도를 지나 해양으로 팽창하면서 해양세력과의 충돌로 높은 파고를 일으키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 해역에 높은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마침내 바이든의 당선과 왕이의 한일 양국 방문으로 동북아에 본격적으로 미·중 간 패권 싸움의 서막이 올랐다. 바이든의 동맹 강화 전략의 구체적인 일차 카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소집이다. 바이든은 지난 봄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취임 첫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개최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해 공통의 어젠다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퇴보하는 권위주의와 싸우겠다는 복안이다.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정상회의 개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약화된 동맹국들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이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는 12월 1일 중국의 대북제재 비협조에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 원)를 준다는 ‘북한 포상금’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새로 개설했다. 국무부는 중국 앞바다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2년간 관련 정보 788건을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단 한 번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남포항에서 출항하는 북한 선박을 위성사진으로 촬영하여 공개하고 있다.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1호를 위반하여 약 4억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북한은 편의치적(便宜置籍, 실제로는 북한 선박이나 제3국 국적으로 등록)이나 추적 신호를 끄고 운항하는 방법, 또는 우회하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북한 인공기를 단 선박들이 수백 차례에 걸쳐 중국 Ningbo-저우산 지역으로 석탄을 실어 날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하였다. 한반도 주변 해역이 미중 갈등의 주요 무대로 등장한 것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 11월 4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춘 ‘해경법’ 초안을 발표하여 일본과 한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수산업 터전인 동해와 서해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황폐화되는 시점에 미·중 등 강대국들의 갈등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해양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우리 대응책이 정밀하고 고도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왕이 부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확정하고, 북한도 내년 초 8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방침을 정하는 7개월 동안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북한이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군사도발을 하진 않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북경으로 돌아갔다. 북한이 왕이 부장의 발언대로 군사도발을 자제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 7개월이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기간이라는 점은 왕이 부장의 지적대로 명약관화하다. 1960~70년대 미중 외교의 주역으로 미 외교가의 원로로 꼽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미중 갈등의 조속한 봉합을 주문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1차 대전에 비견할 수 있는 재앙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명·청 시대 등 대륙이 급변하는 전환기에 사태의 흐름을 정확하고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백척간두의 국가위기를 경험하였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전환기(transition)에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아군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늠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위를 결정할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대응전략,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수산업과 해운·물류의 현장인 우리의 바다를 적시에 지키지 못하면 곧이어 육지에도 높은 파고가 밀려온다는 사실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역사적 교훈이다. 해양에서의 국익을 지키는 노력은 육지보다 어렵고 복잡하다. 바다는 육지라는 삶의 터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동학적으로 움직이는 바다의 특성상 위기가 닥쳐오는 순간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설사 사태를 인지한다하더라도 대응 또한 용이하지 않다. 2021년 신축년 우리의 해양을 지키는 대응전략을 거시적으로 제시하면서 미시적인 전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불법조업이 강화되는 데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은 2020년 유엔안보리제재와 코로나 봉쇄 등에 따른 경제난으로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국 어선들에게 조업권을 대거 매각하였다. 우리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매입한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영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새해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중국 어선은 그룹을 지어 북한 바다에서의 조업을 핑계로 우리측 수역을 월경하여 불법조업을 힘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을 비롯한 당국의 보다 철저한 감시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장비와 인력 등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둘째, 해운·물류의 생명라인을 수호하는 보다 국제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중동지역의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 말라카 해협 및 동남아 해역과 중국의 남중국해를 통해 이동하는 우리의 수출입과 원류의 수송 라인은 국가 무역의 생명선이다. 기존에는 해적을 비롯한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글로벌 협력 체제의 가동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2021년에는 미중 간의 갈등에 따른 마찰로 우리의 수송 라인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20년에는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 인도, 일본 및 호주 등이 참가하는 쿼드(QUAD) 합동작전이 진행되었으나 훈련의 규모나 강도에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미국의 쿼드 플러스 전략으로 한국의 참여 역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양한 해양에서의 갈등 시나리오가 예기치 못한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며 수송 라인이 위협받지 않도록 'Plan B' 가동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는 서해상에서 북한과 중국 간에 유엔제재를 위반한 불법환적이나 밀수 거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북중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응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여 형해화 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주도로 북한과 중국 선박의 나포 등이 서해나 동지나해 등에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경의 경비정이나 화물선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일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우발사태 대응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2021년 외국 선박에 대해 '물리적인 발포의 조건'을 낮추는 '해경법'의 시행을 예고한 만큼 모든 시나리오별 가상 대응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신축년을 상징하는 소는 강하고 부지런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 바다에 높은 바다가 몰려 올 가능성은 높지만 소처럼 강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면 우리의 해양을 안전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믿는다.

[동향 분석]

대북제재와 코로나 속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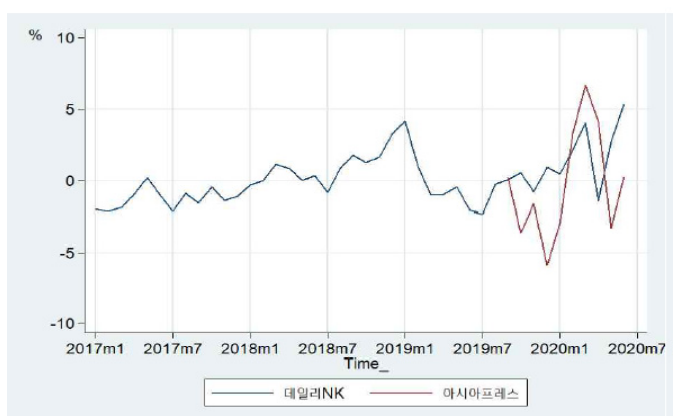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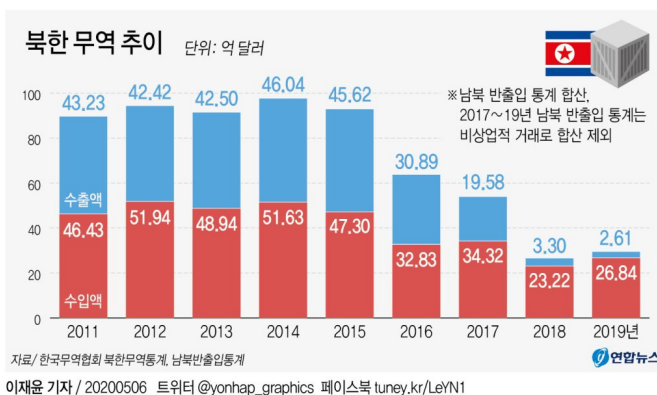
- 해양수산 분야 즉시 추진 가능 사업을 제안하며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꽤 막힌 남북관계, 대북제재와 코로나라는 이중고

2018~2019년 한반도 정세가 획기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선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시작한 2020년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지난 9월 서해 수역에서 발생한 우리 공무원의 실종·사망은 남북관계와 우리 국민의 대북인식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을 전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가 극도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는 뜻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이렇게 까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일까? 여기에는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대북제재의 지속과 코로나라는 복병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림1〉 북한의 무역 및 환율 추이



자료: (왼쪽) <https://m.yna.co.kr/view/GYH20200506000100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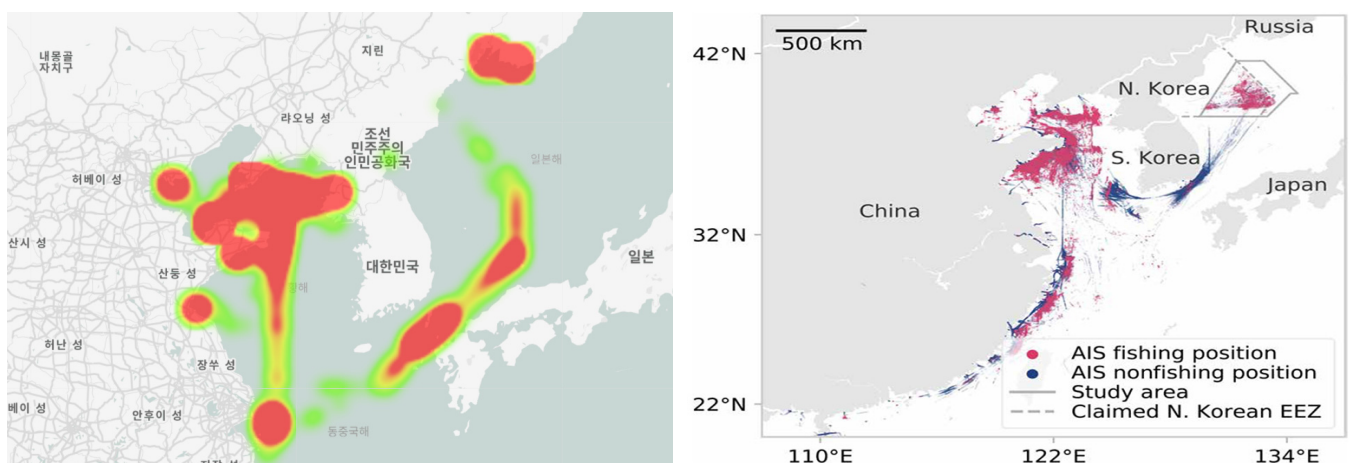
(오른쪽) 최지영, “최근 북한 시장의 물가 및 환율 동향”, 『KINU 온라인 시리즈』 CO 20-13, 2020.7.10., p.4.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중이 흘린 눈물은 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북제재로 인한 수출입 급감과 사상 최대 무역 적자가 이를 뒷받침한다.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전인 2015년 약 93억 달러였던 북한 무역 규모는 2019년 약 29억 달러로 1/3 수준으로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연간 2~10억 달러 내외였던 무역적자가 20억~2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북한의 외화보유고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수년 내로 북한이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무역 규모는 줄었지만 대중국 의존도는 95.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마저도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 강화 이후에도 8천 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환율이 2020년 초 급등락을 보인데 이어 지난 11월 중순에는 달러당 7천원 이하로 떨어진 바 있다. 북한의 환율 급락 원인은 국경 차단으로 인한 외화 사용 어려움, 북한의 외화 사용 단속 강화 및 원화로의 환전 수요 증가, 중국의 위안화 동조 현상 등이 지적된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 바다와 연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처럼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경제 흐름에 필수적인 원유 공급 제한을 비롯해 최대 수출품목인 광물, 의류, 수산물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암암리에 상기 품목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최근에는 그 방식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 선박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대표적이다. 북한산 석탄 수출 의심 선박의 북-중 노선 운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더 이상 위장이나 숨김없이 석탄을 실어 나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수입이 올해 3분기까지 약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더 이상 대북제재와 코로나에 따른 봉쇄를 견디지 못하면서 몸을 사리지 않고 타개책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2〉 북한 선박의 활동 범위(2020)와 동해 중국 어선 입어(2017~2018)



자료: (왼쪽) <https://www.nknews.org/pro/north-korea-ship-tracking/dashboard/>

(오른쪽) Jaeyoon Park et. al., "Illuminating dark fishing fleets in North Korea," Science Advances, Vol.6, No.30, 22 Jul 2020.

한편, 동해 북측 수역에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금지한 조업권 판매를 통해 중국 어선의 오징어 조업이 여전히 성행 중이다. 2020년 7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실린 논문(Jaeyoon Park et. al, 2020)에 따르면 2017~2018년 동해에서 오징어를 가장 많이 잡은 국가는 중국이었다. 이들의 규모는 1,600대가 넘고 어획한 오징어는 16만 톤이 넘으며 금액으로 환산 시 4억4천만 달러(5,263억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선단 규모는 중국 전체 원양어선 규모의 1/3에 해당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불법 조업 사례이며 오징어 어획량은 한국과 일본의 공식 어획량을 더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바다에 대한 북한의 관심, 북한이 바다를 되찾는 데 협력하려면...

이렇게 보면 북한이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육상 중심의 개발에 총력을 동원하는 한편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바다에도 눈을 돌려왔다. 2013년부터 북한은 수산업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매년 신년사에서 수산을 언급하며 농·축산과 함께 먹는 문제 해결의 3대 축으로 고려했다. 2018년까지는 적극적인 ‘어로 전투’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2019년부터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로 문구를 선회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자원 이용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산자원 보호, 바다오염 방지, 해저광물자원 확보 등 현대 사회에서 해양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¹⁾ 선진과학기술 도입과 자원문제 해결, 대외경제활동의 확대발전을 위해 경제건설에서 해양개발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²⁾ 북한은 야심차게 준비해온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해 금강산에도 고성향해안관광지구와 해금강해안공원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고성향은 현대아산이 투자한 민항이 개발되어 있는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이곳에 여객선 터미널 건설을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이 줄곧 노력해온 금강산 경유 크루즈관광 개발 가능성이 예상된다.

〈그림3〉 금강산 남측 시설 및 인근에 개발된 항만



장예진 기자 / 20191127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자료: (왼쪽)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3011053504>

(오른쪽)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7053851504>

1) 조영남, “현 시기 해양자원보호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2014년 제60권 제2호, pp.83-86.
2) 리대곤, “경제건설에서 해양개발구개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2018년 제64권 제1호, pp. 96-99.

이처럼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힘겨워 하면서도 핵문제는 타협하지 않고 코로나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기회를 엿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이 그토록 거부한다면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만한 다른 기회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항만에서의 코로나 방역 체계와 물자 지원, 중국 어선의 남획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순찰과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적인 식량난을 해소하고 단백질 공급을 돕는 내수면 어종 양식 협력, 철저한 코로나 방역 하의 부분적인 관광 재개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은 대북제재에서 금지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설사 방역 물품 중에 이중용도 가능 물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인도주의지원 물자로 충분히 양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는 전 세계가 경제공동체일 뿐 아니라 환경공동체이고 생명공동체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니, 전 세계를 논하기 전에 한반도부터가 시작이다. K방역이나 환경협력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하기보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는 이웃의 안녕이 곧 나의 안녕과 직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은 협력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굳이 협력하지 않고 버틸 이유도 없다. 서로의 안녕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한 협력을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

[북한동향]

2020년 북한 해양수산, 어선어업 감소하고 해운 증가

- 노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진희권 (인제대)

개 관

■ 2020년,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서 ‘정면돌파’를 선포: ‘기본전선’은 경제, ‘주타격 방향’은 농업으로 설정

-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2월 28~31일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 노선을 대내외에 밝힘
- 매년 1월 1일 발표하던 ‘신년사’는 없었으므로 이를 대체한 상기 전원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2020년 북한의 정책 방향을 전망할 수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돌파의 기본전선이 경제라며, ‘자강력’을 키워 국제제재 장기화에 대비할 것을 주문
- 경제정책의 구체적 과제로 내각의 역할 강화, 상업체계 복원, 과학기술 발전, 절약을 제시했으며 농업을 경제의 주타격 방향으로 강조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천재지변(폭우·태풍)으로 인해 최근 북한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

- 2020년 8월, 김정은 위원장 주재 하에 진행된 당 중앙위 7기 6차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명시, 이례적으로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경이 폐쇄, 2020년 10월 기준으로 북중 무역액은 전년대비 76% 감소한 약 5억3천6백만 달러를 기록

- 2020년 8~9월, 거듭된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함경도와 곡창지대인 황해도가 큰 피해를 입었음.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마저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식량난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
- 최근 농촌진흥청은 2020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5.2%(24만 톤) 감소한 464만 톤이며, 쌀은 전년 대비 9.8%(22만 톤) 감소한 202만 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

■ 2020년 4월 최고인민회의,³⁾ 내각 사업보고에서 수산업 분야 과제는 미(未)언급

- 2019년 내각의 사업보고에서는 “수산부문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어로전투를 힘 있게 전개하였으며 어장탐색지원체계를 갱신하여 물고기잡이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였”다고 평가했으나, 2020년 과제에서는 수산 부문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 과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나 내각 사업보고 등에 수산업 분야 과제는 적은 비중이지만 꾸준히 언급되었음

■ 2020년 노동신문 전수 조사 결과, 해양수산 보도 비중은 전년대비 35.7% 감소, 어선어업 관련 기사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해양수산 기사는 191건으로 2019년(297건)대비 35.7%감소했으며, 수산업 기사는 78건으로 2019년(162건)대비 51.9% 감소
- 월별 통계를 살펴본 결과 8월 이후 보도가 급감했으며 수산업, 특히 어선어업 기사는 8월 이후 2건에 불과했음. 겨울철 성어기에 어선어업 관련 보도가 증가했던 사례에 비추면 이례적임
- 김정은 위원장이 ‘주타격 방향’이라 칭했던 농업 분야의 생산 증대 기조에 따라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지건설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간척 관련 보도의 숫자도 42건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
- 해운·항만 분야 보도는 1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2019년 6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의 해상 운송에 대한 기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1〉 노동신문 수산업 분야 기사 분류(2015년~2020년)

연도	어선어업	양어·양식	유통·가공	합계
2015년	81	37	3	121
2016년	52	18	1	71
2017년	55	35	1	91
2018년	27	38	10	75
2019년	44	91	27	162
2020년	13	58	7	78
합계	272	277	49	598

자료: 진희권윤인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산정책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p.49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9, 2020년 통계 보완. 2020년 통계는 12월 23일까지 취합 결과

3)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북한 헌법은 제87조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와 달리 사실상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2〉 노동신문 해양수산 분야 기사 분류(2020년)

	어선어업	양어·양식	유통·가공	간척	해운항만	해양관광· 친수문화	해양환경· 자원관리	기타	합계
1월	3	1	-	1	-	-	5	-	10
2월	1	4	-	2	-	-	2	3	12
3월	4	6	3	4	-	3	-	-	20
4월	2	4	-	2	1	1	8	5	23
5월	1	6	-	6	2	1	1	3	21
6월	-	7	-	4	1	1	-	2	16
7월	-	18	-	9	1	2	1	-	31
8월	2	4	-	2	-	-	1	2	11
9월	-	-	-	4	2	-	3	3	12
10월	-	3	1	3	5	-	2	-	14
11월	-	1	2	1	2	1	1	1	9
12월	-	4	1	4	-	1	2	2	14
합계	13	58	7	42	14	10	26	21	191

자료: 필자 정리. 12월 23일까지 취합 결과.

분야별 동향

어선어업

■ 어선어업 기사 비중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 9월 이후 기사는 전무하였으며, 겨울철 성어기에 도 불구하고 어획 관련 기사는 없음

- 어선어업 분야 기사는 2018년(27건), 2019년(44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관련 기사 13건 중 김정일·김정은 등 최고지도자 관련 일화를 소개하는 기사가 5건이었으며 직접적인 생산성과를 소개하는 기사는 전무
- 북한은 서해에서 흑한기를 피해 휴어기를 가지며, 새해에 일제히 어로활동에 돌입하고 있음. 2020년 4월 10일에 일제히 어로 활동에 돌입했으나 2014년(2월28일), 2015년(2월23일), 2017년(3월7일)에 비해 현저하게 늦어짐

■ ‘강원도수산물사업소’ 완공, ‘단천선박수리공장’의 수리 능력 확대, ‘남포대경수산물사업소’의 수산물 가공 공장 신축 등

- 최근 북한 언론에서는 강원도가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고 있다며, 이를 ‘강원도정신’으로 보도
- 강원도의 여러 모범 중 하나로 ‘강원도수산물사업소’와 ‘어구종합공장’이 꼽히고 있음. 「로동신문」은 ‘강원도수산물사업소’를 통천에 들어선 현대적인 수산물 생산 및 가공기지, 2019년 말 완공되어 2020년 1월 6일 준공식이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각종 그물과 밧줄, 양식자재, 잠수복 등을 생산하는 어구종합공장은 2019년 8월 현재 공정의 80%가 진행

- ‘단천선박수리공장’은 수리 공간 확대, 설비 개선, 기능 제고를 통해 선박수리능력 뿐만 아니라, ‘황금해’ 등 선박 제작 능력도 확대
- ‘남포대경수산사업소’는 자체의 힘으로 연간 1,000 톤 규모의 수산물 가공공장을 신축

양어·양식

■ 양어·양식 기사는 전년 대비 34.8% 감소하였으나, 바다양식 기사 비중은 16.9%(’19)에서 41.4%(’20)로 대폭 증가

- 양어·양식 기사는 2019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수산업 보도 중 비율은 56.2%(’19)에서 74.4%(’20)로 증가. 특히 바다양식 관련 기사의 보도 및 비중이 대폭 증가
- 양어·양식 분야 보도는 7월에 18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어선어업의 보도 양상과 유사

〈표3〉 노동신문 양어·양식 분야 기사 분류(2019~2020년)

	내수면 양어	바다양식·양어		합계
		바다양식	바다양어	
2019년	64	15	10	89
2020년	25	24	9	58

자료: 필자 정리

■ 내수면 양어 보도 횟수와 비중은 감소, 여러 지역과 분야의 기사가 산재해 일정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예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메기 양어와 그물우리(가두리)양어에 대한 보도 비중이 높았으나 올해는 예년과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음
-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정책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절약’을 제시한 가운데, 폐자재를 활용한 양식 자재 생산과 가금류 사육 시설의 폐산물을 활용한 양식 먹이 첨가제 생산성과를 홍보하는 기사가 증가
- 함경북도 장연호에 내수면 그물우리 양어장이 완공되었으며 남포시와 함경북도, 자강도 등의 공장, 기업소에 소규모 그물우리 양어장이 건설되었음
- 원산시에 내수면 양어사업소 건설이 진행 중이며, 황해도 ‘범안양어장’과 평안북도 ‘구장양어장’의 개건·현대화 공사가 진행되었음
- 평안남도 안주시 종어사업소 ‘은어양어기지’가 완공되어 은어 치어 수백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평안북도 ‘태천종어사업소’에서는 쏘가리 치어 생산에 성공하여 치어 1만 5천 마리를 태천호에 방류
- 순천메기공장 내 자라양식 기지가 신축되었으며, 평안북도 ‘태천자라공장’이 완공

■ 바다양식 기사 중 다시마 양식 성과 보도가 8건이었으며, 바다양식을 독려하는 기사와 각지 바다양식장 면적 확대 소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 바다양식 생산량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는 주로 서해 황해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동해에서는 해삼, 성게 등 조개류 양식이 성행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에는 동해에서도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바다양식 생산 시설 확대는 동해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음. 강원도 원산에 '갈마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 '김책대경수산종합기업소'와 '청진수산사업소' 등에서 양식 생산 면적이 확대

■ 바다양어에서는 치어 방류 기사 비중이 높았으며, 함경북도에 대서양연어 생산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

- 북한은 2015년 전후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과 '낙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에서 대서양연어를 양식·생산하기 시작함. 이후 '고말산대서양연어바다양어사업소'가 신설되었으며, 최근에는 '직하대서양연어종어장' 1단계 건설이 완공. 이들 생산 시설은 모두 함경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고말산대서양연어바다양어사업소'는 2,000㎡ 규모의 축양장 신축 공사를 진행, 올해 명태 치어 10만 여 마리 방류
- 서해 '남포대경수산사업소'와 황해남도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는 각각 복어 치어 20여만 마리를 방류=
- 동해 함경남도 '리원수산사업소'와 '양화수산사업소'는 가자미 치어 수백만 마리를, '홍원수산사업소'는 우럭 치어 3만 여 마리를 방류, '단천남천방류어업사업소'와 '북천남천방류어업사업소'에서는 연어 치어 백 수십만 마리를 방류

간척

■ 농업 생산량 증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간석지건설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 북한은 2020년이 '간석지건설 5개년 계획'의 첫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 대상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19년 12월 28~31일)에서는 "새 땅 찾기와 간석지건설을 힘있게 벌려 논벼와 강냉이 재배면적을 늘일 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고 하나 '간석지건설 5개년 계획'과 직접적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북한은 올해 간석지 공사를 통해 약 2,000정보(약 2km²)의 농지가 확보되었다고 밝혔음
- 2017년부터 시작된 평안남도 안석간석지 공사가 2020년 9월 15일 완공되었으며 황해남도 용매도, 천수도 간석지, 평안북도 흥건도, 월도 간석지 등 대규모 간척 공사가 진행 중

해운·항만

■ 해운·항만 보도는 14건으로 2019년 6건에 비해 증가, 9월 이후 함경북도 태풍 피해 복구 물자의 해상 운송 관련 소식 4건 보도

- 함경북도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의 해상 운송 관련 기사가 9월 이후 4건 보도
- 함흥시에서 생산된 시멘트는 흥남항을 통해 청진항으로 운송되었으며, 기타 자재들은 원산항을 통해 청진항으로 운송되었다고 함. 물자 운송이 집중된 시기에는 5일 동안 2만 톤의 물자를 운송하였다고 함

시사점

■ 2020년 북한의 경제 침체 원인은 두 단계로 구분, 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첫 번째 단계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원인이며, 북한은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를 통해 농업 생산량 확대 중심의 대책을 수립하며 대응해 나섬. 한정된 자원을 농업 등 중요산업에 우선 투자하는 정책 기조로 인해 수산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서해 출어 시기 지연, 어선어업 기사 감소 등은 연료 부족으로 인한 어선 가동률 저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내수면 양어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
- 두 번째 단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폭우-태풍 피해가 원인이며, 해상 어로 활동 통제와 피해복구 지역에 대한 인력과 물자의 우선 투자 등으로 인해 수산업 분야의 활동은 대단히 위축된 상황으로 추정

■ 북한의 2020년 수산업 생산량은 급감, 향후 바다양식 중심 수산업 정책 추진 예상

- 북한 수산업 생산량 급감의 주요한 원인은 연료 부족과 해상 활동 통제에 의한 어선어업 생산량 감소이며,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내수면과 바다양식 시설 피해와 생산량 감소도 예상
- 북한은 경제 상황에 따라 수산업 정책의 중심을 아래 그림과 같이 변화시켰음.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어선어업을 강조했으나 2016년부터 어선어업 분야 보도 빈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내수면 양어 관련 기사가 증가. 2020년의 경우 내수면 양어와 바다양식 분야 기사 빈도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4〉 북한 경제 상황에 따른 수산업 정책 변화

경제 침체 ↔ 경제 회복

바다양식 ▶ 내수면양어 ▶ 어선어업

- 이와 같은 경향은 바다양식이 인력과 간단한 설비만으로도 기본적 생산이 가능하며, 내수면 양어와 어선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연료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앞서 설명한 북한의 경제 현황과 코로나19 백신 등의 수급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경제 상황은 당분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다양식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주시, 이를 감안한 대북정책과 남북협력 사업 준비가 필요

- 북한의 감염병 대응 능력과 보건의료 체계는 낙후한 상황이라 코로나19 확산 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 또한 이를 두려워하며 국경폐쇄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북한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외부의 지원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 국제사회의 지원을 수용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방역을 요구할 것이 예견

[알려 드립니다]

「북한해양수산리뷰」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논문, 칼럼 투고

- 주제: 북한 해양수산 및 남북 해양수산 협력
- 분량 및 형식: (소)논문의 경우 A4 10매 내외, 칼럼은 A4 2매 내외 이며, 형식은 자유
(단, 게재 시 연구진과 협의 후 조정)
-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독자의견 및 Q&A

- 독자의견: 500자 내외의 「북한해양수산리뷰」에 대한 소감, 자유 형식
- Q&A: 북한 해양수산 및 해양수산 남북협력에 대한 질문, 형식 및 분량 제한 없음
(연구진에서 질문을 선별해 다음 호에 Q&A 코너를 통해 답변)
- 게재 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독자 투고 및 의견, 질문 보내실 곳: nkreview@kmi.re.kr